



# AIDS

##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룰라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청소년 임신과 여성 에이즈 확산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콘돔 사용의 성관계를 권장했다고 일간 에스파냐가 8일 보도했다.

룰라 대통령은 특히 수요일 연설에서 교회를 언급하며, 국제여성 날은 '우리 모두의 머리속에 있는 위신을 퇴치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바축제 기간에 히오에서 있었던 국제여성의 날 행사에서 룰라 대통령은 "성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체적으로 필요하며, 인간이나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보호장비(콘돔)를 기부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오직 이 방법만이 브라질의 에이즈와 성병에서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구쟁해야 할 문제들을 뒤로 숨기는 것은 완전한 위선행위며, 자신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교회도 이에 대해 논쟁하기를 꺼려하고, 과연 누가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 30%정도가 조기임신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엄청난 수의 조기 임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가 위선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 논할 용기가 없어서 이러한 엄청난 조기 임신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지난 수요일 판 아메리카 대회 중에 전염성 성병(DST)/에이즈 방지 캠페인을 발의 것과 여성성병 확산 방지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 보건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여성 사이 에이즈가 44%나 증가했다.

지난 80년대, 남녀 에이즈 감염 비율은 26.5대1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남성 대 여성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겨우 1.5대1 까지 좁혀졌다. 정부는 여성들의 에이즈 테스트 비율을 높이길 원하고 있고(현재 35%), 어머니에서 아기에게 전염되는 직계 에이즈 감염 비율을(현재 4%) 2008년까지 1%로 줄이길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 보호상비를 2008년까지 1천만 개로 증가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400만개 보급)

〈프리임경제 2007. 3. 9〉

## 올 징병검사부터 에이즈 검사 실시

올해 징병검사에서부터 에이즈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병무청은 "29일부터 실시되는 올해 징병검사에 에이즈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우선 서울지방병무청을 시작으로 해 다른 지방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들의 입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조사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자로 확정되면 바로 면제 조치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7급으로 편정, 재신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신과 질환 등 병무청이 보유한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은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민간 병원에 위탁검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정신질환 등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해서는 임상 심리사가 직접 심리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또 금년도 징병 검사자부터 '나라사랑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카드는 징병검사 때 발급받아 징병검사 이후부터 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각종 복무 관련 여비 및 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 등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역할을 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 도입으로 병사들의 급여 지급 및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각 군에서는 연간 211억여 원의 예산과 278명의 행정병 소요를, 병무청은 6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7. 1. 28〉

## 인권위, "유흥업소 종사자 에이즈 강제검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 4회 9월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을 삭제·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 부검·복부 상단 등의 치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치료나 보호소치를 할 수 있게 한 소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 거부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방소처 없이 성행위 등 전파 행위를 한 감염인을 처벌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태도다.

특히 인권위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강제 검진 조항과 관련해 "검진 대상이 대부분 여성인 반면 실제 감염인의 90%는 남성인 점에 비춰, 감염 예방의 효과를 알 수 없고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삭제 쪽으로 결론냈다.

이밖에 인권위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배우자 이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검사와 통계 중심의 에이즈 정책이 감염 관리나 예방 효과를 높이기보다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초장하고, 오히려 감염인을 공중보건 체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염인에 대한 지원과 예방, 교육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정부 초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가 지난해 권고한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139개 과제 가운데 31개(22%)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 정부 초안이 인권위 권고안보다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 2007. 2. 27〉

## 에이즈감염인 관리 해외 우수 사례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인권침해 및 성차별 논란을 빚으면서 외국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에이즈 감염인(HIV감염인·AIDS환자)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철저한 비밀보장과 처벌금지, 에이즈 예방교육 시행 등이 이들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은 주 보건국이

감염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실명관리센터에 보고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간주해 고용이나 공식 서비스·시설 이용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HIV/AIDS법은 취직이나 보험가입시 에이즈 강제검사 금지 및 익명검사를 장려하고 7~12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와 동의없이 검사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에이즈검사를 해주고 감염인이 확인되어도 성명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는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며 에이즈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지성해 복지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에이즈교육시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태국은 감염인 정보를 실명으로 관리했으나 비밀누설로 인한 사살 사례가 나타나자 반듯이 익명으로 검사하도록 정책을 비웠으며 음성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도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교육하고 석 달 뒤 재검사를 받게 한다. 영국은 에이즈 검사를 강제로 하지 않고, 일반 진료이나 비뇨기과클리닉에서 무료검사를 해수며 호주는 감염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주 식판라도 하지 않는다.

〈연말뉴스 2007. 2. 25〉

## 伊병원 에이즈감염자 장기 환자이식 파문

이탈리아 피렌체의 카레기대병원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의 장기를 3명의 환자에게 이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카레기대병원은 장기 기증자의 영역에 대한 에이즈 감염 여부 테스트 결과가 잘못 기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직후 이 같은 치명적 과실이 있었음을 공식 발표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1일 전했다.

장기 기증자는 뇌출혈로 숨진 41세의 여성으로,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넬체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레기대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학전문기들은 장기 이식을 받은 3명의 환자가 이번 장기 이식의 결과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해럴드경제 2007. 2. 22〉